

희석된 지분율에 사모펀드 개입... 알짜기업 '경영권 위태'

경영권분쟁 사례 살펴보니

12월 결산법인들이 오는 3월 '기업 청문회'로 불리는 주주총회 시즌에 본격 돌입한다.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표 대결이 예고된 알짜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막판까지 법적공방과 함께 지분 확보를 위한 공수 양측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앞치락뒤치락'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업체의 경영권을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연합의 대결이 한층 격화되면서 반전예 반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경영권 싸움은 지난해 9월 공개매수에 돌입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영풍·MBK 연합이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예상과 달리 승리했다. 영풍·MBK 연합이 초반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상호주 제한' 방식으로 영풍·MBK 연합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상황을 역전시켰다.

영풍·MBK 연합이 '상호주 제한' 방식에 대해 불법을 주장하며 최윤범 회장 등을 형사 고발하고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신입 사외이사 7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 회장은 5일 영풍 정기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와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역으로 영풍 이사회 진입을 노리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나온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아워홀 마곡 본사 전경.



/아워홀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고려아연 세계 1위 경영권 두고 최윤범 vs 연합 대결 '반전에 반전'

티웨이항공-대명소노그룹 대명소노, 티웨이 2대 주주 올라 내달 주총이후 최대주주 오를지도

◆티웨이항공 창과 방패의 대결

티웨이항공의 경영권을 둘러싼 대명소노그룹과 예림당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주총을 한 달여 앞두고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에 나선 대명소노그룹은 쏘비치·소노캠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국내 리조트 업계 1위 기업이다.

대명소노는 지난해 7월부터 JKL과 트너스가 보유한 티웨이항공 지분을 사들이면서 2대 주주에 올랐다. 1대 주주인 예림당과 지분율 차이는 3.3%포인트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서는 '항공사업 TF'를 출범시키는 등 대대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예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대명소노그룹은 3월 주총을 앞두고 사측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 이사회에서 소노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증자에 참여하는 소노가 단숨에 최대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대명소노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룹사 자산총액과 경영현황, 자

금력 측면에서 예림당을 앞서는 건 사실이다. 최대 주주간 체급 등에서 격차가 크다는 점을 앞세워 주주들의 표심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명소노는 오는 6월 에어프레미아의 주총에서도 본격적인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명소노는 두 회사를 합쳐 새로운 항공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홀 남매간 경영권 분쟁 속 한화그룹 합류

국내 2위 단체급식 업체인 아워홀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에는 한화그룹 3남 김동선 한화캐리리더·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이 뛰어 들었다.

아워홀 창업주의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회장은 매각에 긍정적이다. 이들의 지분은 57.84%로, 8600억원에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계약을 한 화그룹과 2월 중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변수는 아워홀 오너일가 막내인 구지은 전 부회장의 경영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다. 장남과 장녀에게 경영권을 뺏긴 구지은 전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구지은 전 부회장은 한화그룹 측에 현 경영진인 언니·오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장했다. 회사 내 정관을 활용한 것으로

아워홀 경영권 매각-확보 두고 장남·장녀 vs 막내 '남매 분쟁'

한미약품 임종운 이사-3자 연합 사이언스 341만9578주 매각계약 올해 경영권 갈등 '종지부'에 관심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또 현 경영진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을 넘어야 한다.

◆한미약품 경영권 갈등 1년, 새로운 전환점 만나

1년 넘게 끌어온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올해 종지부를 찍을 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종운 한미약품 부회장 모녀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했다. 이후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운·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반대하며 한미약품그룹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초반에 형제 측을 공개 지지했던 한미약품그룹의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모녀 측으로 돌아서는 등 경영권 갈등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임종운 대표이사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모녀 측과 형제 측이 5대 5 동수를 이루었다.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이사를 앞세워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해 왔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종운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 6명, 임종운·종훈 형제 측 4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장남 임종운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내이사가 3자 연합 측과 뜻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임종운 사내이사가 3자 연합 측과 한미사이언스 주식 341만9578주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임종운 사내이사는 한양정밀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205만1747주를 759억원에, 길링턴 유한회사에는 136만7831주를 506억원에 장외 매도했다. 임종운 사내이사가 내놓는 주식 규모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수준이며, 임종운 사내이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806만5822주의 42.3%를 처분하게 됐다. 오는 3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늦어도 3월 초에는 임종운 대표가 추가적으로 의사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양성운·이청하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34조 규모 배터리...'서 계속

전세가율 17개월 연속 상승... 수도권 집값 오르나

1월 아파트 전세가율 68% 역대최고 "수도권 '매매 전환' 집값 상승 유도 미분양 많은 지방, 시장회복 어려워 갭투자·강통전세 위험 동시 상승"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17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가율 상승이 매매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지방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로 2022년 11월 조사 표본 개편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1%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인천(67.6%), 경기(66.0%) 등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전세가율 상승이 매매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으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뉴시스

일부 단지에서는 매매 호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로 인한 개발호재, 기존 인프라 등으로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 전세 세입자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로 전환하면서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도 충북(78.8%)과 전남(78.5%) 등에서 전세가율 상승세가 확인됐지만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약식 미분양) 주택은 1만4802가구로 전체의 79.4%를 차지하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 교수는 "지방의 경우 전세가율

이 상승하고 있지만 매매가가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여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세 수요도 줄어들어 전세가율 상승이 시장 회복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문제인 인구 유출과 감소 문제로 인해 매매시장 반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가율 상승이 반드시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갭투자가 쉬워지지만, 동시에 '강통전세'(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상태) 위험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세가율 상승에 따른 주택 시장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양극화와 함께 지방 시도 내에서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崔 대행 "산업발전 위해 반도체법 등 조속 처리를"

아울러 미국 신(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당초 어제(4일) 시행 예정이던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와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대책을 발표한 후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에 3조원 추가 투자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